

보도시점 2026. 4. 24.(금) 17:30 (2026. 4. 24.(금) 석간)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임금 3천여만원 체불 사업주 체포

- 상시 외근이라더니, 심야 급습에 덜미 잡힌 기피 사업주
-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 체불, 강제수사 동원해 엄중 처벌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노동자 다수의 임금 및 퇴직금 총 3천여만원을 체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수사를 기피한 사업주 A씨(인천광역시 서구, 50대)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소속 노동자 다수의 금품을 장기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피하고 출석요구를 10차례 이상 응하지 않았으며, 주간에는 외근을 이유로 여러 장소를 이동하고 다니면서 노동청의 수사를 피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북부지청은 A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도 체불금품을 청산할 의지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 A씨는 야간에는 외출을 마치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숙식한다는 익명의 체보를 토대로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하여, 4월 22일 22:00경 사업장을 급습하여 사무실에서 숙식하고 있던 A씨를 즉시 체포하였다.

A씨는 체포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체불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특히 A씨는 2019년부터 소속 노동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3,300만원을 체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들의 연락을 일부러 기피하고 잠적하는 등 노동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

다.

인천북부지청은 A씨의 금품체불 위반 혐의가 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인천검찰청에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북부지청 이상목 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며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담당 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책임자	과 장	염종식 (032-540-7907)
		담당자	근로감독관	박홍찬 (032-540-7962)

